황금돼지해 고객 사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68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2월 21일 (음력 1월 4일) 수요일

결혼? 맞선 100번에도 아직이라면!

"이대론 아무 일도 못한다"

문화수도조성위 기능 한계론 대두

"문광부-광주시 이견 조정 힘 실어줘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과 특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정작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최고 자문·심의 기구인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조성위)는 지난 10월 제2기 출범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체인 문광부와 광주시는 조성 사업의 구체적 추진 사업을 놓고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원활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지역 문화 전문가들은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 의견 수렴과 문광부와 광주시간 이견을 조율해 줄 조정적 성격의 기구가 간절하지만 자문·심의 기구 성격인 조성위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성위는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3월 말부터 발효되고 종합계획도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지만 조정·심의적 성격이란 조직상의 한계에 부딪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확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문광부와 광주시가 세부 사업추진 방향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데도 팔짱만 끼고 있는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2기 조성위원회 송재구 위원장을 비롯한 조성위원들은 실무기능을 갖춘 조성위 직속 사무국인 '기획단' 설치 등을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시켜 줄 것을 문광부장관에게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조성위는 오는 4월 문광부가 지역 의견을 수렴한 후,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종합계획안을 제출해 올 경우 심의만 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광주시와 지역 전문가들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인 만큼 조성위원회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광부와 광주시간 이견을 조절하는 등 조성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광부는 지난 해 말 자체적으로 마련한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을 광주시와 의회, 지역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기관 및 개인에게 공개한 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체 연구팀을 구성해 시안을 마련중이며, 국회문광위 소속인 지병문(광주 남구) 의원은 지난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전문가토론을 개최해 도출한 의견을 광주시와 문광부에 전달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최근 문화수도 시민대토론회를 가졌다.

이 같은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토론회 결과, 광주시와 문광부는 문화전당의 기능과 문화산업 발전 방향, 도시 재구성 문제 등에 대해 크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최종 종합계획 도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건교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없다"

'지방 죽이는 획일 규제' 반발

건설교통부가 광주를 비롯한 부산, 대구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놓고 '해제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각 지자체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획일적 규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교부는 20일 광주시와 부산시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과 관련, "지방이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갖추더라도 시장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로 접어들기 전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올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함으로써 '해제 불가' 방침을 뒷받침 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와 건설업계는 건교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와 부산 등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건에 해당됨에도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지방 건설경기가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03년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이후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200여개의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은 데다 지난달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9천세대를 넘어서는 등 부동산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광주를 떠나거나 휴업중인 업체까지 감안할 경우 지역 건설경기 침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에서만 전출 및 폐업한 건설업체는 모두 73곳에 달할 만큼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11일 지역 내 아파트 분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주택투기, 전매행위 등이 해소됐다며 건교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했으며, 부산시와 대구시 등도 투기과열지구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정치권도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놓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등 27명은 지난 9일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에서 건교부 장관이 6개월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된 경우' 건교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해제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광주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지역 주택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않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실상으로 지방을 재단하는 것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社告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 주 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 관 : 광주-전남육상경기연맹, 한국마라톤여행기획, 데일리커뮤니케이션
• 후 원 : 광주지방보훈청
• 협 찬 : 대주피오레 광주은행 KB 국민은행 GS칼텍스 SK telecom 대한화재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Naraka Shop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광주일보 은펜상' 2007년 1월 수상자 박상하 교수

'광주일보 은펜상' 2007년 1월 수상자로 박상하(48·나주대 사회복지과 교수)씨가 선정됐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1월 17일자 '행복 마을이 우려되는 이유'라는 기고를 통해 전남도가 추진하려는 행복 마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에게는 광주일보 마크가 새겨진 은촉 만년필을 드립니다.

우람학원 창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